



「한은법」 개정안, 국회 본회의 통과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 발의된 「한은법」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.

- 동 개정안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,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1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.
- 한은은 최초 개정안에 포함된 금융회사에 대한 한은의 단독조사권이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동 개정안 통과로 금융시스템 안정성 향상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한 한은의 국제적 위상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.

■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금융안정 책무 명시, 한은의 금융회사 조사권 강화, 긴급유동성 지원제도 개선, 금융채 지급준비금 부과 등이 포함됨.

- 「한은법」 목적에 ‘물가안정’ 이외에 ‘금융안정’을 추가하여 한은이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.
- 지금까지 주로 은행에 국한된 한은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고, 공동조사 이행 착수 기간도 대통령령에 명시하도록 하여 공동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함.
- 한은이 은행에 긴급여신을 제공할 수 있는 실행조건을 기존의 ‘통화와 은행업의 안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중대한 긴급사태’에서 ‘자금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상태’로 완화하여 금융위기 등 비상사태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.
- 한편, 지급준비금 부과대상이 아니었던 금융채의 경우도 동 개정안에 따라 부과대상에 포함됨.

(「한은법」 개정에 따른 향후 계획, 한은, 9/1)